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 인상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담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11개는 운영 방법이 개선된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8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평가단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은 조세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물이용 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 재활용 부과금 등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부담금 평가는 2001년 12월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7개월간 102개에 이르는 정부 부담금 전부를 대상으로 이만우 고려대학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간평가단의 자료 조사와 해당 부처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됐다.

부담금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산업단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소하천 원상 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안림 수익자 부담

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부담금 등은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고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공동 부담금은 민간 자금 성격이 강해 민간자금화하고 전기사업자·수용자 부담금 중 사업자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돼 폐지된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원·식약청등 폐수 불법배출 - 서울시, 위반업소 107곳 무더기 행정처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종 세균을 연구하고 버리는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위 기관의 경우 각종 미생물이나 세균들을 연구 목적으로 배양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이나 미생물의 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져 오염원 확인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최근 2/4분기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07곳을 적발하고 개선·폐쇄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

렸다.

시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보건원, 식약청(수질 연구) 등 42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된 우정사(귀금속 가공)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웅진코웨이개발(주) 등 28개 업소는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등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환경관련 해외 기술인력에 골드카드 발급

- 체류기간 활동범위 확대 등 출입국 특혜 제공

하·폐수 재이용 기술분야 전문가 등 5개 환경분야 해외기술인력에게 출입국 특혜가 부여되는 "골드카드제"가 시행된다.

산자부는 BT, NT, 신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상의 특혜제도인 "골드카드"발급 대상을 현행 IT, e-비즈니스 분야에서, BT, NT, 디지털가전, 신소재, 환경·에너지 수

송기계 등 6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환경·에너지분야는 하·폐수 재이용 기술분야 전문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분야 전문가, 환경오염 측정용 센서 및 장비 기술분야 전문가, 청정생산 설계 및 공정 기술분야 전문가,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 EIP) 조성기술 분야의 EIP 정책수립 전문가, EIP 사업 실행 전문가, 공급자망 활용 등의 전문가 등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8월 10일부터 국내기업이 상위 6개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을 유치하고자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용 추천이 있는 경우 복수시증 발급 및 발급절차 간소화 체류기간 상한 확대(2년 3년) 체류자격외 활동범위 확대(근무처 추가) 등의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오수·분뇨에 관한 시행령 개정 ·공포

환경부는 2002.12.26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3.7.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동 잡지 환경업무정보의 법률을 참고하기 바란다.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대폭 인상

안동시가 환경오염예방과 농촌기금 마련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대폭 인상하자 지역민들의 폐비닐수집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말 쓰레기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집 보상금 지급지침을 개정, 폐비닐 지급단가를 1kg당 5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첨가비율 1% 미만으로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8.5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8.5일자로 개정·공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 사용되어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그

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페플라스틱 연료화의 길 열려

환경부는 그간 물질적으로 재활용(Material Recycling) 하는 것이 어려워 위 대부분 매립 또는 단순 소각처리 하 여왔던 혼합 및 복합재질 페플라스틱을 고형화하여 연료화(RPF : Refused Plastic Fuel) 할 수 있는 품질·규격기준을 마련, 이를 8월 2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품질·규격기준 내용을 보면 중량기준으로 페플라스틱 함량이 60%이상, 직경이 50mm이하, 길이가 100mm이하, 발열량은 kg당 6,000kcal 이상, HCL(염화수소)농도가 1,000PPM이하 및 수분함량이 10%이하인 것으로 정했다.

그간 국내 페플라스틱의 연간발생량은 400 500만톤으로 이 가운데 15%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처리 되는 등 귀중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러한 페플라 스틱을 파쇄, 성형, 건조 등 일정한 공정을 거쳐 발열량이 높고(6,000kcal/kg 이상) 일정하며, 배출가스 등 환경특성과 연소특성이 우수한 고행연료를 제조하여 발전소, 시멘트 킬른, 대형산업용 보일러 등의 석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 남동산단 대기보전특별지역 지정

인천 남동산업단지 일대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인근에 송도 신도시와 논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 일대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토지이용과 배출시설 설치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市)는 남동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농도 등을 분석해 내년 중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남동산업단지에는 현재 3천800여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체가 130여곳에

이르고 있다.

준조세' 환경부과금 안걸린다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환경 부담금이 제대로 건히지 않고 있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환경부와 징수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업 및 개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부담금은 대기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 성격의 준조세로 해마다 징수율이 고작 60%를 겨우 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들어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각종 환경 부과금 총액은 8천7백57억여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62%에 불과, 5천4백30억여원만 징수돼 3천3백26억여원이 건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영향평가 구비서류 소규모 사업은 2종만 제출

환경정보망 구축으로 복잡한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발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의 2개 분야로 줄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수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초저황경유 지원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

초저황 경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혜택을 주겠다던 정부정책이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5월말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유에 함유된 황 함량을 ℓ당 현행 430ppm에서 30ppm으로 낮춰 2006년 이전에 시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ℓ당 300원 가량 부과되는 교통세 중 최고 62원의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주무 부처인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지원수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약속된 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3만1천배럴의 초저황 경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1당 62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 1천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보조금 지원으로, 기획예산처는 세제 감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책이 올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확정되지 못할 경우 초저황 경유 생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원대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배출업소 948곳 적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경인지역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948곳이 적발됐다.

지난 8월 3일 경인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2/4분기동안 인천·경기지역 9천84곳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총 948건(위반율 10.4%)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 181건, 조업정지 70건, 사용중지 140건, 폐쇄명령 166건 등 928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403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내역별로는 기준초과 188건, 비정상가동 61건, 무허가(미신고) 306건, 기타 39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 양주군 J산업, B섬유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W업공은 무허가 배출시설, Y섬유는 무허가 폐수시설 설치·운영등으로 각각 폐쇄명령, 고발조치됐다.

경기 시흥시 S통상은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으며 인천시 남구 H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이 배출허용기준(면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수질배출허용기준은 수차에 걸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 포천군 D섬유와 양주군 D산업 등은 조업정지(10일),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안산시 S산업, B협동조합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분기중 경인지역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율은 경기도는 7천85개소에 대한 단속에서 11.2%인 790개소, 인천시는 1천999개소 가운데 7.9%인 158개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위반업소중 고발건수는 경기도 333건, 인천시 7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단속실적으로는 경인

지역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단속업소 수는 9천84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315개소) 보다 2천769개소가 늘어났으며, 환경오염 위반업소수도 100개소나 증가했다.

폐기물업체 10곳중 1곳 법규위반

낙동강유역의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10곳중 1곳 정도는 환경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낙동강유역 지정폐기물 배출 및처리업체 825곳을 점검한 결과 70개업체(8.5%)가 폐기물관리 법규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 중 1곳은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14곳은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11곳은 형사고발됐으며 나머지 44곳은 조치명령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181곳의 폐기물처리 업체는 무허가 폐기물처리,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처리 기록 미유지 등 전체 업체의 11%인 모두 20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 배출업체는 644곳 가운데 50곳(8%)이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관리자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적발됐다.

낙동강환경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보관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비롯 고발조치 등 사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포항제철소 등 3개 업체 적발

경북 포항시는 비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포항철강공단 내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우 원료 야적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원료 이송시설 운영미흡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관리 소홀 벨트 콘베아 세척시설 폐기물 보관 부적정 슬라그 처리시설 폐수처리오니 보관기준 부적정 압연공장 주변 일대 낙진 및 일부 폐수 호우때 바다 유출 등 7개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압연공장 주변에서 발생된 낙진과 폐수는 평소 형산강과 냉천 등 2개의 배출구를 통해 정화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용량의 부족(시간당 1.8mm 강우 때 정상처리 가능)으로 호우가 내릴 경우 정상 처리되지 않은 일부 폐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시가 밝혔다.

공단 내 금속조립 업체인 (주)상명금

속의 경우 폐수방지시설 비정상운영으로 최근 7기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단속됐고 슬라그 운송 업체인 (주)한중은 폐수허용기준치가 다소 초과돼 적발됐다.

2/4분기(4~6월)중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 30,520개 업소 단속, 위반업소 2,009개소 적발

환경부는 2003년 2/4분기(4~6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에서 총 30,520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2,009건(위반율 6.6%)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명령 572건, 조업정지 182건, 사용중지 248건, 폐쇄명령 238건 등 1,969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68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였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주), 정원실업, (주)우상염공, 그리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동양제철화학(주)울산공장, (주)삼미통상, (주)현대기공, 하남전자(주), (주)태백광업, 강구수생동물가공시설폐수처리장,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 등 모두 680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

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591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속대상이 되는 배출업소수와 대비하여 단속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48.6%), 충청북도(47.8%), 광주광역시(43.5%)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단속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23.5%), 제주도(25.3%), 전라북도(28.7%) 순이며,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11.2%), 제주도(10.3%), 인천광역시(7.9%)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2.6%), 충청남도(4.0%), 서울특별시(4.4%) 순이었다

고발건수는 모두 680건으로 경기도가 333건, 인천광역시 70건, 부산광역시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4~6월) 대비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금년 2/4분기(4~6월)에 단속한 배출업소의 수는 30,52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8개소(1.7%)가 늘어났으며, 위반업소수는 25개소(위반율 0.2%감)가 감소하였고 고발건수는 159개소가 줄어들었다.

환경세 도입 추진

에너지가격의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징수된 세수(2001년 기준 10조5천억원)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부과해 시설 개선에 전액 투자하고 있는 반면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세목을 바꿔 세수의 일정 부분을 환경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말뿐

정부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각종 물건을 팔 때 손님들에게 무료로 비닐봉투와 쇼핑백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서점과 약국 대부분이 이를 어기고 있어 강

력한 단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인력부족을 핑계로 단속을 제대로 안해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로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시설뿐 아니라 10평 이상 규모의 서점과 약국도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공짜로 나눠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점과 약국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을 모르고 있거나 알려라도 단속이 제대로 안돼 여전히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비닐봉투의 경우 완전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리는 등 토양오염의 주요원인이 된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활동과 함께 단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반입 감시 강화

- 벌점제 적용, 단가 차등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감시 업무가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최근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위반차량을 처벌하는 방식에서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형별 벌점제에 의한 반입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미리 배출업소별 다음 시료채취 시기를 알 수 없도록 '시료채취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기준위반 차량은 반입이 정지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카드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지속적으로 대조확인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이동식 차량번호 검색시스템을 내년에도 도입해 매립현장 입구 등에서 수시로 반입정지차량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감시요원의 임금을 지자체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임기도 2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바꿔 책임감 및 소속감을 높이게 된다.

공사는 우수 업체를 포상하고 근무 성적이 우수한 감시요원에게는 해외견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정지차량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반입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입규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불법폐기물 반입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